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유 동 열*

목 차

I. 머리말

II. 통일전선의 개념과 역사

1. 통일전선의 개념과 유형
2. 통일전선의 기원과 변천과정

III. 북한의 통일전선 체계

1. 북한 통일전선의 성격과 위상
2. 북한 통일전선의 기본강령과 형성원칙
3. 북한의 통일전선기구

IV. 북한의 통일전선 구사의 양상 및 특징

1. 북한의 통일전선 구사 양상
2. 북한 통일전선의 특징

V. 맺는말

1. 향후 전망
2. 대책

*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I. 머리말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더욱 정교하게 구사되며 강화되고 있다. 물론 6·15공동선언으로 당국자간 또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다방면에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점은 지난 60여년간 심화된 남북 이질화와 갈등, 반목을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화해와 협력의 장(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진행된 핵실험(10.3), 국적 위장간첩 정경학사건(8.18), 미사일발사(7.5) 및 서해교전사태(2002)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보면, 6·15공동선언정신 실현에 대한 북한정권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지난 58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나, 유독 대남전략영역은 변화하지 않고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적화전락노선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과 유화노선을 적절히 배합하며 이른바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에 주력해 왔다.¹⁾ 실제 북한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급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며 이에 편승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해왔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북한정권의 대남전략노선의 핵심인 통일전선전술을 냉철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 수 있으며, 결국 우리

1) 유동열,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분석", 『북한학보』 제29집(서울: 북한학회, 2004), 104쪽.

의 국가안보 및 민족생존에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그 개념에서부터 역사, 체계, 구사양상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비하고자 한다.

II. 통일전선의 개념과 역사

1. 통일전선의 개념과 유형

통일전선(統一戰線)이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동맹전술로, 공산당세력이 주적(主敵)²⁾을 타도하는데 있어 자파(自派)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조직전술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그 혁명에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이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 즉 주적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당(공산당)과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첫째,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때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파세력의 힘만 가지고서 주적타도가 가능할 때는 결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나, 자파세력의 힘이 딸릴때 비(非)공산세력과 제휴하여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주적을 타도하려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자들은 주적타도라는 목표달성 후에 제휴했던 비(非)공산세력들을 하나 둘씩 고립화시켜 제

2) 공산세력에 있어서 주적이란 통상 지배권력인 정권과 자본가를 의미한다.

3)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102쪽.

거한다는 점이다. 결국 필요할때 힘을 빌려 이용해 놓고 후에 제거하는 전형적인 공산분자들의 전술인 것이다.

통일전선의 유형에는 ①구축대상에 따라 상층 통일전선, 중층 통일전선, 하층 통일전선 ②범위에 따라 지역 통일전선, 전역 통일전선 ③조직형태에 따라 연합전선, 단일전선 ④식민지 여부에 따라 민족해방 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 ⑤합법여부에 따라 합법통일전선, 비합법통일전선, 반(半)합법통일전선 ⑥내용에 따라 반미구국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조국통일전선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고 있다.

2. 통일전선의 기원과 변천과정

통일전선의 역사는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때 부터 통일전선의 개념이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개념과는 다소 의미를 달리하고 있으나 기본정신은 변함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역사적으로 통일전선의 개념이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

1) 마르크스, 엥겔스의 계급동맹론

통일전선의 효시는 마르크스(K.Marx)와 엥겔스(F.Engels)의 '계급동맹론'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1848)의 제4장에서 각 나라별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조건에 맞게 당면한 목표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다른 세력들과 일시적으로 동맹이나 공동행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⁵⁾ 이후 마르크스는 <1848년부터 1850

4)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제10권 제2호(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8), 101쪽.

5) 소련 맑스레닌주의연구소, 이상돈 편역, 『맑스 엥겔스선집』1권 (서울: 백의, 1989), 45~47쪽.

년까지의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1850)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노동계급에 지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노동계급과 농민들의 동맹을 주장하였다.⁶⁾ 즉 주적타도를 위한 계급간의 연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2) 레닌의 노농동맹론, 좌익블럭론, 소비에트론

레닌(V.I. Lenin)은 마르크스·엔겔스의 계급동맹론을 계승하여, 러시아혁명시 노동자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전체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주로 貧農)을 견인, 동맹대상으로 삼아 혁명을 성사시킨바 있다. 이른바 ‘노·농(勞農)동맹론’이 그것이다. 짜르(러시아 황제)라는 주적타도를 위해 농민을 보조역량으로 견인하여 활용한 것이다. 레닌은 러시아혁명 성사 후 <공산주의 좌익소아병>(1920)이란 책을 통해 통일전선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적타도를 위해서는 비록 불확실한 세력(非공산세력을 의미)이라 할지라도 견인해야 함을 강조한 점이다.⁷⁾

이러한 레닌의 통일전선론은 노동동맹론, 좌익블럭론, 소비에트론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첫째 노동동맹론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러시아혁명의 각 단계에서의 주요과제로 도출되었다. 러시아혁명의 2단계 중 1단계인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노동동맹은 노동자계급과 농민일반과의 동맹전술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2단계인 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에서는 노동계급과 프롤레타리아화된 농민(빈농 등)과의 동맹이 기본형태로 추진되었다.

6) 위의 책, 129~243쪽.

7) 김영학, “공산주의전략과 전술”, 『공안연구』 제4집, (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89), 12쪽
레닌은 “정면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 하에서는 상대방의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고 동맹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 세력일지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라”라고 공산당 동맹전술을 밝히고 있다.

둘째 좌익블럭론은 제1차 러시아혁명시기 짜리즘과 부르조아에 대한 공동투쟁을 위해 레닌은 노농동맹 뿐 아니라 제 정치세력간의 일시적 행동통일 및 전술적 제휴를 위해 ‘아래로부터의 계급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위로부터의’ 정치적 제휴를 전술적으로 활용했는데, ‘위로부터의 동맹’ 전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좌익블럭론은 두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데, 첫째는 짜리즘과 부르조아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들을 고립, 분열, 약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각종 소자산가 세력을 추종하는 대중들을 불세비키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다. 좌익블럭론은 훗날 코민테른⁸⁾의 ‘상층통일전선 전술’의 원형이 되었다.

셋째 소비에트론은 레닌이 계급동맹의 실질적 구현체이자 노동자, 농민의 혁명기관인 소비에트를 계급동맹과 혁명의 권력형태를 연결시켜주는 기관으로 삼았던 동맹론을 지칭한다. 소비에트는 노동자들의 정치성향의 차이를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통일을 기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었기에 거대한 계급조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레닌은 이런 의미를 갖는 소비에트를 노동자 외에도 농민, 병사조직으로 확대하며 이 속에서 계급동맹을 실현할 것을 역설하였다.

3) 제3차 코민테른의 노동자통일전선

제3차 코민테른대회(1921.6)에서 ‘통일전선’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동 대회에서는 공산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산당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결집하기 위한 전술로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 (노동자 통일전선)을 제창하였다. 동 대회에서 대중 전취를 위한 ‘노동자 통일전선전술’의 구사를 전술적 변화의 핵심으로 제기하였다. 당시 코민테른은 각국 공산당 내의 극좌모험

8) 코민테른(COMINTERN: Communist International)은 레닌에 의해 1919년 창립된 국제공산당의 조직으로 1943년 해체되었다.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한다.

주의노선에 의한 대중적 지지상실을 우려하여 노동대중을 견인하기 위한 전선통일을 요구하며,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대중속으로’라는 슬로건이 공식 채택되었다. 코민테른은 1921년 12월 18일 제3차 코민테른대회의 지침을 발전시켜 ‘노동자 통일전선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 여기의 통일전선은 노동자계급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주적을 포위, 고립화시키는 동맹수법으로 노동자 통일전선운동이었다. 이후 통일전선전술은 재건 제2인터내셔널, 각국 공산당이 사회당, 사회민주당 등에 유용하게 적용된바 있다.

4) 제4차 코민테른의 반제통일전선

제4차 코민테른대회(1922.11)에서는 제3차 대회의 지침인 노동자 통일전선전술을 일반 민주주의적 요구를 옹호할 임무, 반동과 파시즘에 대해 투쟁해야 할 임무 등을 결합시킴으로써 통일전선전술을 한층 발전시켰다. 특히 식민지들의 민족해방투쟁 경험을 일반화하여 반제통일전선의 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라는 강령을 입안하였다.⁹⁾

5) 제7차 코민테른의 디미트로프테제(반파쇼인민전선)

현재적 의미의 통일전선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1935년 제7차 코민테른대회에서 채택한 소위 ‘디미트로프(Dimitrov)테제’¹⁰⁾이다. 당시 코민테른은 히틀러의 나찌즘, 뭇솔리니의 파시즘 및 일본의 군국주의 공세에 대항하여 공산당세력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계급들을 ‘반파시즘 민주주의 옹호’라는 반파쇼투쟁에 결집시키는 인민전선전술 방침을 제시하였다.

9) 위의 책, 198쪽.

10) 이 테제는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장이며 당시 코민테른 집행위원장(의장)이었던 디미트로프(Georgii Mikhailovich Dimitrov)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도시소자산계급, 지식인 등 비(非)공산세력과의 계급동맹을 형성하여 주적인 과쇼를 타도한 다음, 비(非)공산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반과쇼 인민전선은 파시즘에 직면한 프랑스 공산당과 스페인 공산당에서 제일 먼저 채택되었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 일반화되었다. 인민전선 결성 결과 1936년 프랑스 선거와 스페인에서 공산당을 선두로 한 인민전선이 승리를 거둔 사례를 제외하면 서유럽지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 인민전선에 바탕한 투쟁은 커다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반과쇼인민전선은 제국주의세력에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민족해방전선의 형태로 더 확대되어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국공(國共)합작¹¹⁾시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반(反)과쇼 인민전선’은 1940년대 동구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이행전략인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의 수행시 중요한 전술로 활용되어 소련공산당의 지도아래 오늘날의 통일전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²⁾

통일전선전술은 국제적으로는 반제노선, 국내적으로는 반독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및 반제반봉건혁명의 주요 전술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쿠바혁명(1959년), 칠레 연합정부(1968년), 베트남혁명(1974년) 그리고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인민해방전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사되며, 국제공산혁명에 기여한바 있다.

11) 중국의 국공합작은 1923년 ‘군벌타도와 민주정부 수립, 삼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하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1차 국공합작을 성사시켰으나 손문(孫文)의 사망으로 결렬되었고, 1937년 일제침략에 대항한 항일민족전선의 일환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2차 국공합작의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의 책략에 이용당하여 고립화되고 대륙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대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사례는 공산당세력의 통일전선전술의 간교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12) 스탈린은 소련공산당 제15차 당대회(1927)시 정치보고를 통해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노동자계급의 수백만 대중을 공산주의편으로 돌아서게 하려면 대중자신이 공산주의정책이 옳바르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다 … 수백만 대중에게 당 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당의 교묘하고도 숙련된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일전선의 사상적 근원이 있다.”

Ⅲ. 북한의 통일전선 체계

1. 북한 통일전선의 성격과 위상

1) 통일전선의 성격규정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³⁾ 김일성은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과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 책임일꾼과의 담화에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¹⁴⁾라는 연설을 하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 수립을 위해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 대열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후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에서 통일전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체계화시키고 있다.¹⁵⁾

북한은 통일전선을 기본적으로 보조역량의 편성문제로 성격지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조역량의 강화를 통해 주력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남한혁명의 동력인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잘

13)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역사를 조작한 공식문헌을 통해 ‘조국광복회’(1936)의 사례를 들면서 민족통일전선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있다.

14)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2~4쪽.

15) 북한 통일전선에 대한 지침서는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조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평양: 조국통일사, 1981);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등의 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다.

하면 첫째로,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야만 반혁명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수도 있으며 혁명력량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드리도록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합니다”(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권, 92쪽).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의 보조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 중략 -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노동계급과 그 당이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망라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노선의 하나이다”(김창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4권』, 1985, 173쪽).

2) 통일전선과 남조선혁명전략

북한 통일전선의 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대남혁명전략)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혁명전술이 바로 통일전선전술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간략히 살펴보겠다.¹⁶⁾

북한의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통일 달성이다.¹⁷⁾ 북한

16)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3』(서울: 북한연구소, 1995) 중 필자가 집필한 '대남전략편'과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보안특별과 정교제』(서울: 경찰수사보안연구소, 2005) 참고.

은 먼저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 인민정권(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한반도전역에 걸친 공산화혁명 즉 ‘전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소위 연속 2단계혁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로 예비혁명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연이어 2단계 목적혁명인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시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남조선혁명전략으로 설정한바 있다.

북한은 남한혁명의 동력(動力) 즉 혁명역량 편성으로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고 있는데, 이중 통일전선은 바로 광범위한 민중을 규합하기 위한 보조역량의 개념을 의미한다.

〈대남혁명의 역량편성〉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및 전위당
보조역량	도시소자산계급, 애국적 군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반제 애국인, 종교인, 동요하는 인텔리 및 각계 각종 인민

원래 북한은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와 농민, 보조역량으로 진보적인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자산계층, 애국적 군인, 민족 자본가 및 각계 각종 인민을 편성하였는데, 1985년 7월 27일 한국민

17)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죽민주전선(한민전, 현 반제민전)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보조역량의 제1순위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어 1993년 8월 이후부터 보조역량의 제1순위인 '진보적 인텔리(지식인)'를 주력군대열에 올려놓고 있다.¹⁸⁾

북한은 이러한 남한혁명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하당 구축전술, 통일전선전술, 프락치(Fracia)전술,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전술, 경제투쟁·정치투쟁전술, 폭력·비폭력투쟁 전술, 테러전술, 게릴라전술, 무장봉기전술, 인민항쟁전술, 대화전술, 평화공존전술, 국군와해전취전술, 선동슬로건 배합전술, 폭로전술 등 수많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통일전선전술은 바로 이중 하나인 것이다.

3) 북한 통일전선의 위상

북한은 남한에서 통일전선을 형성, 발전시키는 것은 남한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북한은 남한혁명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승리의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남한내 공산(좌익)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공산세력을 아닐지라도 미국과 남한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나 세력을 규합하여 이들의 힘으로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용공정권인 인민정권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전술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술적 개념'인 통일전선을 '전략적 개념'으로 위상 짓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남한혁명에서 전술적 차원인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지시하며 통일전선을 전략

18) 유동렬,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서울: 다나, 1996), 280쪽.

전술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¹⁹⁾

“주체의 혁명이론은 통일전선문제를 광범한 중간세력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는 전략적 문제로,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뿐 아니라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물론 사회주의혁명 단계에서도 계속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인 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통일전선사업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김창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4권』, 1985, 173~174쪽.)

“통일전선은 그 어떤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조직이 변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이한 계급, 계층과 정당단체들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 이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주체적 견해라 하겠습니다. -중략-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통일전선의 형성강화는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변혁 단계의 전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되는 것입니다”(북한 「구국의 소리방송」, ‘통일전선 형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 1995.6.21일자)

그러나 통일전선 전술을 북한의 주장대로 ‘전략’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공산혁명의 전략전술 개념²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소치이며 결국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강변하고 있는 저의는 주적 타도시

19) 김창하,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4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178~181쪽;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102쪽.

20)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론”,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교재(2003), 154~155쪽.

광범위하게 연합·제휴했던 세력들을, 목적달성 후 제거하는 통일전선의 간교함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전선을 전략 운운하며 제휴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를 확인해준다.

“통일전선은 노동자계급이 중간계층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 승리는 물론 통일위업 수행에서도 합심협력하여 통일의 그날까지 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 중략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중간세력에 대한 일시적 이용 전술문제로 사고하게 되면 - 중략 -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능적 책략이라고 악선전하는 반동적 지배층들에게 언질을 주는 등 변혁운동 실천에서 엄청난 후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구국의 소리방송, ‘통일전선형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 1995.6.21).

즉 북한의 통일전선은 공산혁명 단계에서 일관하게 견지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과정에서(주로 1단계 혁명시)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잠시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이용하는 술책으로, 주적타도라는 1차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모두 고립화시켜 제거하는 전술인 것이다. 결국 통일전선을 전략이라고 하는 주장은 공산혁명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지적한다.

2. 북한 통일전선의 기본강령과 형성원칙

1) 통일전선의 기본강령

북한은 남한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기본 요구를 반영한 최저강령²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전선

의 기본강령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의 자주란 남한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외세인 ‘미제국주의를 축출’ 하자는 내용이며, 민주란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파쇼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며, 통일이란 전민족의 통일을 위해 북한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현 시기 남한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민주주의전선’(약칭: 민민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²⁾ 이는 북한이 이전에 내세웠던 반미구국전선, 반파쇼민주전선, 전민족통일전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북한 민족민주주의전선의 기본구호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기본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의 ‘민족’이란 외세인 미제(1차 주적)를 축출하고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반미구국전선>을 뜻하며, ‘민주주의’란 독재파쇼정권이라는 남한정권(2차 주적)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의미로 <반파쇼민주연합전선> 구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제 축출(자주)과 현 정권 타도(민주), 연방제 통일(통일)’은 통일전선의 최저강령인 것이다.

2) 통일전선의 형성원칙

북한은 통일전선의 형성원칙을 먼저 전략적 문제인 조직상 원칙과 전술적 원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²³⁾

21)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조직의 정치강령은 최저강령과 최고강령으로 나뉘어지는데, 주로 최저강령은 예비혁명(1단계혁명)시 광범위한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내세운 아주 기본적인 정치노선을 의미하며, 최고강령은 주로 2단계 혁명(목적혁명)시 사회주의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의미한다.

22) 이는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95년 6월 28일자 ‘통일전선체의 본질에 대해’란 운동강좌에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형성해야할 통일전선 조직체는 마땅히 민족민주주의전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3) 허중호, 앞의 책, 106~122쪽.

첫째 조직상의 원칙으로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군중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노선 견지란 전위당(공산당) 영도하에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며, 군중노선이란 혁명의 보조역량인 도시소자산계급, 하층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반제종교인 및 각계각층 민중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전위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이다.

둘째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①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②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③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²⁴⁾ 이외에도 각이한 대상과의 사업에서 통일전선구호를 옹계 제기 할 것, 내부에서의 사업과 외부에서의 사업을 옹계 결합할 것, 조성되는 여러 가지 모순을 옹계 이용할 것, 정당·당파·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협상을 옹계 진행할 것 등이 있다.

3. 북한의 통일전선기구²⁵⁾

북한은 남조선혁명과정에서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일전선을 전담하는 대남공작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는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당 35호실(구 조사부), 통일전선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경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6개 공작부서가

24) 이는 이른바 ‘중층 통일전선’을 시사한 것이다.

25)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체계와 기구의 실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4~34쪽

있는데, 이중 통일전선공작을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전선부'이다.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주 임무는 ①남북대화 주관 ②조총련 등 해외교포 공작사업 ③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주관 ④국내 좌익권 지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에는 직할부서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간첩우회 침투공작을 전담하는 직접침투과, 남북회담 및 교류업무를 전담하는 남북회담과, 조총련 등 해외교포 및 외국인 포섭공작을 전담하는 해외담당과(5개과: 조총련, 일본, 동남아, 미주, 구라파과), 대남심리전 및 남한관련 정보 및 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구 남조선연구소) 등이 있다.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의회,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아태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 등이 있다. 이들 외곽단체들은 대남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체이다.

첫째 조평통은 1961년 5월 31일 결성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시 4·19혁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에 편승하여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며 제 정당 사회단체·각계인사들을 망라하여 급조된 대남통일전선의 전위기구이다. 이 단체의 기능과 임무는 남북 대화업무 전담 국내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 선전 및 통일전선 형성 한국내 국론분열 및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예 : 조평통 서기 국보도, 성명, 백서, 고발장, 공개질문장 발표, 국내 인사들에 대한 편지공세) 등이다. 특히 남북당국자간 회담시 조평통 간부들이 직접 회담 대표로 나서는 등, 남북회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둘째 조국전선은 1946년 2월 15일 박헌영, 여운형, 허헌 등 남한 공산

주의자(398명)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1946년 7월 22일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등 북한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모체로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 사회단체(704명)가 결집되어 결성되었다. 조국전선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로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한국내 주요 사건 발생시 마다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 성명·답화 기자회견 등으로 모략선전하거나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셋째 조아태(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994년 5월 미국, 일본 및 아태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북한의 대외정책 전담기구이다.

넷째 민화협은 1998년 ‘8·15 통일축전’ 제의에 앞서 1998년 6월 8일 급조한 단체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응하여 북한내 정치계, 종교계, 사회계 등 각계단체들과 인사들을 결집하여 통일전선차원에서 ‘민족’을 앞세워 급조한 대남통일전선체이다. 이 단체는 김정일이 발표한 통일방침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4.8)에서 언급한 ‘온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국내 민간단체들과 인사들의 대북접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전위대이다. 반제민전은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일명 민민전, 1985년 7월 27일)을 2005년 3월 23일 개칭한 조직이다. 한민전은 남한내 친북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며 지난 20여년간 대남혁명을 지도해왔으나,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동년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명칭개칭 이후에도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전신인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남혁명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반제민전의 성격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인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을 수행하면서 특히 반제투쟁 즉 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하는 북한의 대남전위대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범민련과 범청학련은 북한이 1990년대에 남한내 반정부재야 인사 해외의 친북동포들을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이다. 겉으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망라한 유일한 전민족통일운동체라 자처하며 순수한 민간통일운동의 기수인양 활동하지만 실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선전선동하는 통일투쟁전위대인 것이다. 심지어 한총련은 범청학련을 자신의 상급조직이라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IV. 북한의 통일전선 구사의 양상 및 특징

1. 북한의 통일전선 구사 양상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 핵심전술로 통일전선전술을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북한이 전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양상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민족’이란 용어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제안하는 각종 회의, 통일관련 방안, 강령, 방침 등은 거의 대부분 상층 통일전선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매 시기마다 우리정부에 제안하는 남북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1948), 대민족회의(1973), 전민족회의(1979), 민족통일촉진대회(1981), 남북연석회의(1988), 민족통일협상회의(1989) 등과 북한이 통일방침으로 제안한 조국통일 5대강령(1973), 조국통일 5개방침(1990),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 등이 통일전선차원의 제안이다.

둘째 북한이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각종 민간급 회의나 행사도 중층·하층 통일전선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매년 8월 15일만 되면 개최되는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6·15우리민족대회, 8·15민족통일대축전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도하여 2005년 결성한 '6·15민족공동위원회'도 대표적인 통일전선체이다.

셋째 북한이 온라인(사이버공간)·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민족대단결이라는 미명 하에 내세우는 각종 대남선동공세도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은 기존의 대남선동수단인 방송매체: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²⁶⁾, 위성TV²⁷⁾ 등 기구를 이용한 전단제작, 살포 외에도, 최근에는 인터넷(Internet)을 통한 대남선동공세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²⁸⁾ 현재 북한은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KCNA) 홈페이지 외에 '구국전선' (한민전 홈페이지) 등 해외친북단체 명의로 자체 홈페이지를 50여개 망 구축해 놓고 대남선동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인 조평통이나 조국전선, 범민련

26)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한민전방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299~305면 참조. 북한은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송출을 중단하였으나, 2003년 8월 15일부터 동 주파수를 통해 북한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7)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부터 관영TV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방송을 위성을 그대로 통하여 송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의 수신이 가능한 실정이다.

28)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의 사이버선동 실상에 대해서는 유동열, "적화된 인터넷매체를 고발한다" 『한국발전리뷰』 2003년 6월호(서울: 한국발전연구원, 2003), 112~118쪽 참조.

및 반제민전 등을 내세워 각종 사안 발생시마다 발표하는 성명서나 격문 또는 대남편지공세도 통일전선의 일환이다.

최근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 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채택한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와 2006년의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도 통일전선차원의 선동구호이다.

또한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이니 하면서 전개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의 합의확산 등 대남공세도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실현, 반통일우익세력 척결” 등이 6·15공동선언 이행관철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6·15공동선언 이후 대폭 확대된 이른바 남북 민간교류도 북한에 의해 통일전선공작 대상으로 충실히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술, 문화, 종교, 체육, 방송 및 분야별 각종 민간교류(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민간단체와 북한당국의 교류임)를 통해 정교한 친북통일전선의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사업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교류시 우리국민들의 민족공조의식을 확산하고, 대북경제의식과 안보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 이행관철, 외세배격 및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 등의 구호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감상적 동포애와 반북의식의 희석화와 친북편향의식을 유

도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10,227명의 방북자(금강산관광 제외)와 6·15통일대축전(평양), 8·15민족대축전(서울), 평양문화 유산답사, 아리랑 공연참관(9.26~10.30) 등을 통해 하층 통일전선과 중층 통일전선을 배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교류라는 명분 하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방북사례비 등)과 대남사업 성과를 챙기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남북교류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친북좌파성향의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측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민간단체요원으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요원들이다. 이들은 남북교류가 마치 그들의 전유물인 양, 북한과의 연대투쟁의 장(場)화하고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동참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이른바 ‘영향공작’ (Influential Operation)도 통일전선의 일환이다.²⁹⁾

북한은 방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대의식의 회색화와 친북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을 정교히 구사하였다. 작년 말 7천여명이 참관한 아리랑공연(북한 김정일의 선군노선과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노선을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집체극)은 이의 극치이다. 또한 북한은 부산 아시안게임(2002),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2004)와 8·15민족통일축전시 남북통일축구대회(2006)에 대규모 미녀응원단을 참가시켜 화려한 응원을 연출시키는 공세적인 방남(訪南) 영향공작을 구사하기도 했다.

여섯째 남북당국자 간에 진행되는 각종 최고위급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각종 경협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도 상층통일전선의 일환이다. 일찍이 김일성은 남북대화를 상층통일전선으로 적

29)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략』 (서울: 경찰수사보안연구소, 2006), 472쪽; 영향공작이란 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가 냉전시대에 미국 및 서방세계 주민들의 여론, 감정, 행동 등을 소련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유도했던 심리전 공작의 일종으로, 자국에 대한 상대방 국민의 적대의식을 완화시켜 자국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작인데, 북한이 이를 충실히 활용해오고 있다.

극 활용할 것을 교시한바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의도에 관계없이 북한의 남북대화를 통일전선의 창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관점에서 볼때, 6·15공동선언은 ‘최상층 통일전선’의 구축에 성공한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일거에 국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희석화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의식, 감상적 통일관, 안보의식이완이 확산된 것 등은 우리입장에서는 역기능이지만, 북한측 입장에서는 최상층통일전선 성사의 열매인 것이다.

일곱째 북한이 미국신문 등 국제 언론 매체에 게재하는 대규모 광고 공세도 국제통일전선공작의 일환이며, 북한이 각종 교류명분을 내세워 중국, 독일 등 제3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또는 각종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 세계 지도층인사를 직접 초청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국제 상층통일전선의 일환이다. 이외 남북해외 3자 연대를 주장하면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을 상대로 ‘친북반한의식’을 주입하는 등 통일전선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구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2. 북한 통일전선의 특징

첫째 북한 통일전선의 특징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실제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통한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³⁰⁾ 그 내용을 보면 타 공산세력 외에 심지어 북한노선을 비판하는 비(非)공산세력이라 할지라도, 민족자본가나 지주 또한 부르주아세력인 야당까지도 통일전선의 최저강령인 ‘미제 축출과 남한정권 타도, 연방제 조국통일’에만 동의한다면 모조리 규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0) 조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형성에 관한 사상』(평양: 조국통일사, 1981년).

결국 북한은 미국, 남한정권, 매판자본가 및 반동관료 등 타도대상만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세 세력을 연합시켜 그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주적을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혁명 성사 후 친북공산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력은 고립화시켜 제거하는 것은 통일전선의 기본이다.

둘째 북한은 통일전선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즐겨 활용하고 있다.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 민족우선, 조선민족제일주의, 대민족회의, 범민족대회 등의 용어는 앞서 지적했듯이 바로 통일전선을 상징하는 구호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한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주민(해외동포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개념인 대남적화혁명의 용어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타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이라 규정하고 있다.³¹⁾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든 주민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프롤레타리아계급(무산자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사업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 하에 남한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

31) 북한 『정치사전』(1981년판).

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좌익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세력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남한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우파성향의 대부분의 자유민주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주의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남한혁명전략 중 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현 정권, 반동관료, 매판자본가, 지주 등을 반민족분자들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 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대상 및 고립화대상으로 타도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국민의 60~7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 하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내 친북좌익세력 및 노동자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민족분자로 개조대상이거나 타도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최근 상층통일전선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추적해보면,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하층통일전선 공작과 함께 상층통일전선 구축공작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의 사례는 서경원의원 포섭공작, 김낙중 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정치지도자나 재야명망인사들에 대한 공작을 강화하고 있고 정주영, 김우중씨 등 고위 경제인을 통한 경험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문선명 목사, 안호상, 오익제 방북 등 고위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공작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상층통일전선 공작이 그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를 상층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우리정부의 의지에 관계없이 북한의 대남전략관점에서 볼 때, 최상층 통일전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타도대상으로 꼽고 있는 재벌(매판자본가로 매도)이나 고위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연이어 방북초청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상층통일전선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경제협력 운운하지만 실은 이들 인사에게 반복적대의식을 버리게 하게 친북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고차원적인 영향공작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층통전은 이들 인사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을 일거에 통일전선체의 영향 하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 위와 같이 상층통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소개한 대로 “하층통전을 기반으로 상층통전을 구축하라”는 통일전선의 원칙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내부에는 하층통전이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바, 매우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실제 1980년이래 우리내부에는 범민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실천연대와 같은 하층통일전선체가 이미 구축된바 있다.

다섯째 6·15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특징은 상층·중층·하층 통일전선공작의 배합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대의식의 회색화와 친북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을 정교히 구사하고 있다.

여섯째 최근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이 ‘국제화’ 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화시키려는 폭넓은 친북통일전선 구축공작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①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이래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서 남북한 및 친북반한성향의 해외동포를 규합하여 대대적인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범민족

대회를 주관하는 상설적인 조직인 범민련, 범청학련 산하에 해외본부를 결성하고 친북통일전선체의 국외화를 달성한 바 있다.

②국제사회의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다. 북한은 미국 조야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친북세력을 형성키 위한 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1994년 북한의 핵문제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핵시설 폭파 등 강경노선으로 치닫자, 북한은 미국 내 진보적 인사 및 언론을 상대로 상층통일전선공작을 집요하게 전개하였고 그 결과 미국조야에서 온건론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 '카터' 카드를 활용하여 일거에 대북압박정책을 유(U)턴시킨바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통일전선 공작의 백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 유명인사들에게 접근하여 반복적대의식을 버리고 북한에 우호적인 의식을 갖도록 유인하는 고차원적인 '영향공작'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지미 카터 이외에 윌리엄 테일러(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세릭 헬리슨(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 재미언론인 문명자(US 아시안뉴스 주필), 리차드슨(현 유엔대사) 카드를 적절히 구사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입장을 대변하도록 공작하고 있다. 1970~80년대 프랑스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도 대표적 예이다.

V. 맺는 말

1. 향후 전망

2007년에도 주체사상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한 북한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적대적인 남북

관계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접적이고 일관적이며 실천적인 사고를 동반한 변화여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³²⁾

향후에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한 '평화적 전도'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여 이른바 '낮은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을 통한 통일논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와의 관계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북한은 즉시 대남유화노선을 중지하고 종래의 대남강경·유화노선 배합이나 강경일변도의 대남노선을 추구하며, 이른바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의 구도인 '비평화적 전도'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노선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는 대남유화노선에 주력을 두며 간헐적으로 대남강경노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미사일발사 등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마당에 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매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핵명역량 강화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여부에 관계없이 대남통일전선기구를 동원하여 전형적인 통일전선과 대남간첩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에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구사될 것으

32)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유화국면을 연출시킨 점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접근과 변화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의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로 보인다. 북한은 기 구축된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당국자회담과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활용하여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책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우리가 북한의 전략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정부는 합리적인 대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현재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①고강도 대안: 압박전략 ②저강도 대안: 포용전략 ③중강도 대안: 포용·압박배합전략 등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3번째 대안인 포용압박배합 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이는 북한이 저강도 대남전술 구사시 유연한 대북포용정책을, 서해안교전과 간첩남파, 핵실험 강행과 같은 고강도 전술 구사시에는 강력한 '힘의 논리'에 의한 대응을 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는 대북정책 수립시 최소한 '냉전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세계가 탈냉전 구도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 한반도는 '냉전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현 시기와 같은 국면에서는 북한의 정교한 대남선동에 대해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하며, 현재 남한내에 구축되어 있는 친북통일전선체와 북한의 거둬드는 통일전선 강화공작을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통일전선 공세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이나 친북좌익권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와해시킬 수 있는 민간차원의 '통일전선 와해전선'(일명 반통전 자유민주전선)을 네트워크화하고, 정부차원의 안보수사력 강화와 이에 따른 관계법 보완, 사기양양책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 통일전선공작의 주요 창구인 남북교류 당사자들은 이른바 남북 민간급 교류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남북 민간급 교류란 정확히 말하면 남한 민간단체와 북한당국의 교류인 것이다. 북한은 체제 속성상 결코 민간단체나 개별인사가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이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아태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등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모두 북한당국과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소속기관이거나 외곽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교류에 나서는 우리측 민간단체들은 북한당국과 교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 민간교류는 요원한 것이며,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남북 교류의 확대에 따른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주관의 방북자교육 내실화(통일전선공작상의 위험성 소개) 대남공작에 악용 당할수 있는 남북교류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 방북자, 대북사업자, 북한주민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대북사업의 대남공작 편익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대응 정부부처내 대(對)통일전선 전문가의 충원 및 양성 해외장기체류자 및 친북인사 입출입 관리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이 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을 악용하며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유발시키며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의 공세적인 대남노선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김정일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과 ‘역 통일전선전술’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난 60여년간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한반도 분단구조의 불행’, 특히 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는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김창순, 북한학기초(중), 『김창순북한연구전집』 2권(서울: 북한연구소, 1996).
- 김창순, 북한의 전략전술, 『김창순북한연구전집』 9권 (서울: 북한연구소, 199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2』 (서울: 북한연구소, 1993).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8).
- 북한 노동신문 및 북한방송문(2003~2006).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서울: 북한연구소, 1996).
-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서울:다나, 1996).
- , 『북한의 대남전략체계와 기구의 실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51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8).
- ,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전술분석”, 『공안론총』 11집 (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9).
- , “적화된 인터넷매체를 고발한다” 『한국발전리뷰』 2003년 6월호(서울: 한국발전연구원, 2003).
- ,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수사지휘과정 교재(서울: 경찰보안수사연수소, 2003).
- ,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 2001년 2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02).
- , “민간교류를 틈탄 통일전선 영향공작을 경계한다”, 『자유공

- 론』 2002년 10월호(서울: 한국자유총연맹, 2002).
- ,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군사논단』 2002년 겨울호(서울: 한국군사학회, 2002).
-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분석”, 『북한학보』 제29집(서울: 북한학회, 2004).
- ,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보안연구소 보안특별과정교재 (2005).
- , “국가안보와 보안경찰”, 국회정책토론회 토론문(2005.9.9).
- , 『북한의 통일전략』 (서울: 경찰수사보안연구소, 2006).
- 소련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이상돈 편역, 『마르크스엥겔스선집』1권 (서울: 백의, 1989).
- 조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 (평양: 조국통일사, 1981).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G.M. 디미트로프, 김대건 편역, 『통일전선론연구: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서울: 거름, 1987).